

기후온난화 방지와 녹색건축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유병권 | You, Byeong-kwon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약력

- 전남대학교 경영학사
- 미시간주립대 도시및지역계획학석사
- 서울시립대 행정학박사
- 제33회 행정고시 재경분야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과장, 지역정책과장 역임

어쩌면 많이 늦었을지도 모르는 화두인 '지구온난화방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리우 세계환경정상회담 이후 국제연합기본협약(1992)과 교토의정서(2007)를 통해 국제적 협력의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당사국총회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제15차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개별 국가는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든스의 역설'이 시사 하듯이 모두가 방관했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도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고, 민간부문과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50.1%), 건축물(25.2%), 수송(1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산업분야의 배출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화될수록 건축물부문이 늘어나 40퍼센트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고치기 쉽지 않고, 잘 관리하면 적은 비용으로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어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녹색건축물 활성화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회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재건축 등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단계에서 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총량제도를 도입하며,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하고, 건축물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건축단계에서는 그린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건축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과 기술개발도 간과할 수 없는 관심영역이다. 정보체계로는 2014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건축물 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다.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소비증명제, 단지별 에너지등급정책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보체계 못지않게 각종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건물 에너지 관리, 고효율설비, 자연에너지 활용과 환경부하 저감기술 등 그린 빌딩 구현기술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건축물분야의 에너지절감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건축주나 관리자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울러 건축서비스업도 보다 에너지절감시대를 적응하고 선도하는 기술과 재능을 필요로 한다. 결국 모든 일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 때, 대학의 커리큘럼도 진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해외진출이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다. ■